

「무너지는 사실보도와 의견보도 원칙」

제주 세미나

(2009. 5. 14~15)

사회자 =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사실과 의견의 구분에 대해서 상당히 철학적이고 학문적 깊이 있게 설명을 해주셨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되는 부분과 이해가 덜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토론과정에서 조금 더 탐색하는 시간을 갖겠다. 우선 지정 토론자부터 토론을 시작하겠다. 지정토론자들은 10분이란 시간동안 토론해주시기 바란다. 우선 윤리위원회 위원이시고 소시모 회장이신 김재옥 선생님께서 토론해주시기 바란다.

김재옥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 저는 소비자시민모임 회장으로써 어떻게 보면 여기 자리에 참석하신 분 중에 비 언론인이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따라서 언론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의견을 낸다는 것이 얼마만큼 적정한지 저도 잘 모르겠다. 그러나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 시민단체 입장과 독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우선 오늘 이준웅 교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하신 언론의 경향성이나 사실과 의견의 구분제안은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동안의 우리가 사실이 아닌데 회사의 의견을 사실인 것처럼 해서 독자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오늘 여러 가지 과학적 자료를 근거로 해서 얘기해주신 점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독자입장에서 보면 사실과 의견이 혼재된 것, 그중에서도 독자들로서는 직접적으로 피해가 오는 부분이 어딘지 생각해봤다. 물론 일반 독자들은 정치적 기사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이나 정당에 대한 여러 관계에 대해서 별로 영향을 많이 받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나 아니냐에 대해서는 민감하지는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어느 정당에서 누가 어떤 말을 했다 안했다는 것이 그저 직접적으로 나의 생활에 큰 영향을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실기사가 아닌 것으로, 의견이 많이 가미되는 기사를 보면 언론사와 이해관계가 많을수록 문제되는 기사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도대체 이것이 사실이야, 어디까지 믿어야되나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 중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경제 분야다.

두 번째는 독자에 흥미 유발하는 것에 사실이 아닌 보도들이 많이 있다. 이것은 의견하고 사실이 구분이 안 되었다고 얘기하기 보단 사실을 왜곡하는 것들이 있어서 센세이셔널한 것을 통해 판매부수를 늘리려하는 행위이지 않을까 보고, 많은 언론사들이 관심을 갖고 정치적인 이슈에 대한 경향이라고 본다.

그중에서 독자 쪽에서 보면 경제기사인데 특히 점점 광고가 어려워지면서 회사들이 광고와 기사를 연결시켜서 사실인지 여부를 알 수 없게 하는 애매한 경우가 있다. 광고와 연결시켜 기업의 광고성 기사를 부정확한 무비판적인 시각으로 이런 것을 씌으로써 결국은 회사로서는 광고를 얻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독자를 기만하게 되고 쓸데없는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낭비를 하게 만든다.

또 한편으로는 그것에 대한 시각이 언론사에 대한 부정적 시각으로까지 연결되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 있다. 흔히 기업의 홍보실에서 나오는 기업홍보 자료를 기사로 많이 쓰는 경

우다. 이런 것들이 나타내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독자들은 기사의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등불인 언론사의 역할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언론사들이 사실보도를 하는 것을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독자들은 독자 오피니언란이나 여러 신문을 비교해보면서 도대체 어떤 말이 사실인지, 또 인터넷을 통해서 그것과 관련한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사실여부를 찾아내는 쓸데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현재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도 몇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해결되지 않는 이유 중에는 언론이 너무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언론이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없는 보도를 설사 한다 할지라도 이것과 관련한 것에 대해서 언론과 싸워서 도움이 될 것이 없다고 대응을 하지말자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것들이 약하다고 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과 의견을 완전히 구분을 해야 되는데 회사 내에 크로스 체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어야 한다고 본다. 기사에 대해서 얼마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 의견을 개진해서 그것을 기사화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큼 잘되고 있는지 회사 내에서 체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스트레이트 기사라든가 여러 가지 기사들을 쓰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충분하지 못한 현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노력은 필요하다.

두 번째는 경제적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한다. 광고도 중요하다. 광고를 통해서 언론사의 여러 가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정하고 진실한 언론의 기사를 통해서 독자를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세 번째는 사실이 아닌 기사에 대한 관대한 사회적인 풍토, 문화라고 생각한다. 지금 언론사나 기자에게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 언론사나 기자는 아플 것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반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 이것을 통해서 언론이 그것을 수용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만 이것이 언론의 공정성이라든지 사실이 아닌 보도, 많은 의견을 리드해나가는 언론의 행위가 점차적으로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따라서 신문윤리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저는 사실 윤리위원이 된지 1년이 채 안되지만 이것을 하면서 윤리위원회에서 지적하는 것이 과연 언론사에서 얼마큼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는다. 왜냐하면 똑같은 유형의 지적이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언론사에서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들어서 저는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언론사들이 정당한 지적이라고 한다면 수용하고 더 신뢰를 받는 언론사로써 태어나기 위한 노력, 그 안에 있는 기자들과 편집하시는 중요한 지위에 계신 분들이 같이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회자 = 발제자가 코멘트하는 것은 세분이 다 토론하신 다음에 몰아서 하겠다. 두 번째로 김경호 제주대 교수께서 토론해주시겠다.

김경호 제주대 교수 = 제가 ‘언론과 진실 그리고 그 이상한 동거’라는 번역서를 냈었다. 센세이셔널한 제목인데 그 책의 일부를 소개하겠다.

대학교 3, 4학년 저널리즘 수업시간에 갑자기 문을 열고 한 여학생이 뛰어 들어오는데 그 뒤에 남학생이 쫓아 들어오면서 서로 격론을 벌이다가 이 학생의 머리채를 잡고 학생의 가방을 들고 나가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나서 수업시간에 이 교수는 무엇을 봤느냐 지금 본 것이 무엇인지 한번 기술해보라고 했다. 그랬더니 본 것은 똑같은 것을 봤는데 저널리즘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전부 다르게 쓰더라는 것이다. 팩트를 전달함에 있어 보는 관점에서 다르게 팩트를 해석해서 거기에 넣더라는 것이다. 어떤 학생은 짧은 치마를 입었더라, 어떤 학생은 갈색 머리였는데 검은색 머리 였더라. 이런 식으로 써서 냈다고 하면서 진실을 찾는 것이 언론으로써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실제 현장에서 느낀 것을 얘기하더라는 것이다. 그것을 제가 번역하면서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고 번역하느라 그분의 입장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고민한 적이 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견과 사실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이 교수께서 하셨고 토론자체가 그런 방향으로 가지만, 사실은 저도 불가능하다고 본다. 예로 들은 것도 바로 그것인데 사실을 보고 있지만 그 사실을 보고 기술함에 있어 이미 본인의 의견이, 용어 선택부터 시작해서 방향성 글을 써내려가면서 이미 거기에 개인의 의견이 표현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견과 사실의 구분은 굉장히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

아까도 철학적인 문학학자들의 업적들을 나열해주셨지만 실제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예로써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다. 이 교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 세 가지가 있는데, 할 수 있다 지켜야한다,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지켜야한다, 마지막으로 불가능하고 할 필요도 없다고 하셨는데 만약 손을 들라면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로 생각한다.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해야 하느냐. 때에 따라서는 YES 때에 따라서는 NO다. YES라고 할 때의 경우는 쌍방이 있어서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경우다. 이런 경우는 언론의 특정한 방향성을 견지해버리면 언론의 보도로 인해서 이미 결정이 날 수 있는 경우로 이미 폐기된 페어니스 닥트린이라는 공정보도의 얘기를 한 번쯤 되새겨볼 그런 사례들이 아닌가 생각한다. 순수의견의 표명과 사실의 적시.

신성택 대법관께서 위원장이시지만 저는 언론학자로서 언론법을 전공하고 있다. 그래서 대법원에 91년도 판례 이후에 대법원이 과연 사실적시와 의견표명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고 어떤 법리를 적용하고 있는가를 분석해서 논문을 낸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을 보면 대법원도 사실적시와 의견표명을 분리해서 사실적시의 경우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을 분석해봤다.

여전히 그 내용을 보면 조금 법원의 성향이 법을 좁혀서 해석하려고 하나 최소한 의견표명에 해당하는 경우는 의견을 존중해서 더 넓은 보호의 범주에 넣고자하는 흐름의 읽었다. 윤리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법적인 문제로 넘어가는 경계선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적시와 의견표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언론이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또 한가지는 숙고해 볼 수 있는 것은 형법 307조에 보면 명예훼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사실적시나 허위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에 성립된다고 되어 있다. 거기에 나가서 의견표명이 아닌 경우 그것이 사실적시나 허위 사실이나인데 의견표명과 사실의 적시가 전제되어서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 부분이 이 교수님께서 다루고자하는 부분 같다. 대법원에서도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분석을 했다. 결국 허위사실이나 사실이나를 판단해서 위법성 조각사유, 즉 공익보도나 진실보도나를 거기의 잣대로 들이댄다면 의견보호라고 하는 원칙 자체가 많이 퇴색이 되어버리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그것도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다. 세계적 추세가 의견의 표명과 사실의 적시를 구분하려

고 하는 것이 있다. 윤리강령에도 명시되어 있고 전문 언론인협회에서도 강조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하나의 흐름이라고 하셨지만 한 면에서는 그것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흐름도 또 하나의 흐름이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다. 그런 경우는 온라인 중심의 저널리즘이 많이 확장되고 지면의 제약이 없는데 전통적인 게이트키퍼시스템이 없는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경향성, 일정정도 방향을 놓고 자신들의 가치를 놓고 기사를 쓰는게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서 또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윤리강령이라는 규범적인 것들에 대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언론인이 취재보도과정에서 어떤 것은 해야 하는 것이고 어떤 것은 배제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해놓고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답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나. 과연 우리 언론인들이 현장에서 윤리강령에 의해 얼마만큼 실천하고 있는지의 문제라고 본다.

저작권과 관련 언론인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관행적으로 타 언론사의 보도기사들의 크레딧을 달지 않고 혹은 거의 흡사하지만 자기이름으로 쓰는 경우들이 많다. 그렇지만 각 언론사마다 그것을 배제하지 말라고 하는 윤리강령은 다 있다는 것이다.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자들은 5~60%정도 되었었다. 그렇다면 거기서 주는 것은, 함의는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서 하라는 것.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근본적으로 원칙은 존중하지만 불가능으로 보는 2.5를 선택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언론인들은 윤리강령으로 내세웠다고 한다면 최소한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성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자 = 김경호 기자협회 회장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까.

김경호 한국기자협회 회장 = 오늘 이 자리는 현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현업을 대표해서 교수님께 논점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2005년도 이 교수께서 신문의 위기 프로젝트를 할 때 저도 같이 한 주제를 잡고 한 기억이 있는데 이 교수께서 학계에서 보는 언론계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고 그 부분에 대한 개선점까지 방향제시를 해주셨던 기억이 난다. 다시 말씀을 듣고 보니 그 고민은 정말 큰 고민이고 저도 역시 그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만큼 이 주제가 굉장히 복잡하고 도덕적 철학적 윤리적인 면까지 걸쳐있는 단순하지 않은 주제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보면 사실보도 객관보도라는 얘기를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자가 그것을 원하지 않겠는가. 모두 다 자기는 사실보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오보를 내지 않으려고 하고 정파성을 배제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그것이 이뤄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실제 정파적이고 사실적이지 않고 편파적이라고 못매를 맞는다. 그렇다면 그 객관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불평 부당한 보도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가치중립적 기사가 가능할지 의문을 던져본다.

가치중립의 개념은 다 아시다시피 막스 베버부터 시작한다. 자연과학자들은 가치중립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70년대부터 경험, 실증주의자 학자들이 특히 행태주의자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를 해왔다. 역시 언론도 어떻게 하면 정파적이고 편향되지 않은 사실만을 전달하는 보도를 할 것이냐는 고민을 해왔고 그 방법론을 발전시켜왔고 현재 한국에서도 그런 방법론을 많이 적용하고 있다.

언론도 역시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한국 언론이 정파적이거나 편향성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구조적인 틀이 있다고 본다. 그것은 역사적 맥락과 같이 연결이 되겠다. 구한말 서구열강이 나라를 침탈해 올 때 그것에 대해 항거를 했던 거기서 독립신문이 나왔다. 독립이 최고의 가치였다. 그리고 해방 이 후에 소위 박정희, 전두환 정권으로 넘어갈 때 까지 그 때는 반독재 민주화라는 큰 가치였고 그러면서 언론이 경쟁이 심해지니까 상업화 얘기가 나온다. 그 이면에 남북분단이라고 하는 커다란 다른 시각이 존재한다. 어떤 부분이던지 간에 서로 다른 생각, 가치관 인식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문 이 방송 저 신문은 다르게 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떤 연구 결과를 가지고 똑같은 연구 결과가 나와야한다는 전제로 역시 자연과학에서는 가능할 것이다. A라는 연구자의 연구결과나 다음에 연구한 B라는 연구자의 결과도 똑같은 것이고 그것이 나중에 하나의 이론, 진리로 될 것이지만 사회과학은 인간과 인간의 사이를 다루기 때문에 결코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독자인 신문, 방송의 소비자들도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그 생각들이 또 변화한다.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존재들이 어떤 현상을 보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전제를 두지 않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객관보도와 사실보도는 선택적이고 제한적이다.

기자가 현장에 와서 보는 관점은 다르다. 그래서 같은 기사를 쓰더라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까 김경호 교수의 지적인데 그렇다면 지금 신문이 왜 똑같은 현상을 가지고 똑같은 보도를 하지 않느냐.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은 획일주의 내지 다양성을 배제하는 것이다. 단지 정확한 팩트에 대한 접근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해석하고 조립하는 기자의 입장에서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 동안의 반성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한다. 저희도 데스크 할 때 기사가 없으면 기사를 내놓으라고 얘기를 한다. 그럼 저희도 기사를 쓰는데 찾아보면 케이스 세 개에 코멘트하나 붙이면 사회면 톱이 되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라든가 그 시대에 통용되었던 가치관이 변했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방식의 글쓰기라든가 취재방식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 또 객관적이어야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미국에서도 객관적이지 못한 부분이 바로 아까 발제문에 나왔던 퍼트남의 얘기다. 뉴스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자가 어떤 시각에서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고 전달하느냐에 따라 뉴스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기자의 역할이다. 그것을 퍼트남은 편집국 내부에 들어가서 기자들이 어떻게 기사를 만드는지 관찰을 함으로써 뉴스메이킹이란 말을 만들었다. 그것은 기자들은 굉장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기자도 신이 아닌 이상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취재·보도하는 존재는 아니다. 어차피 인간은 자기가 보고 느끼고 판단하는 자기가치기준에 놓고 판단하는 그런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그동안 논의되었던 부분이 사변적으로 돌아가고, 기자들은 억울한 부분이 있다. 기자들이 똑바로 취재를 해서 윤리적, 도덕적, 철학적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보도를 해라. 교육을 강조하고 취재관행을 얘기하지만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지 않나. 이런 객관보도에 대해서 항상 숙명과 같은 부담을 갖고 있으면서도 해결되지 못하는, 마치 객관보도라는 것이 통일된 개념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저는 오늘 객관성 사실성에 대해 논의하면서 80년대 한창 논의되었던 ‘공익’이란 말을 떠올려봤다. Public Interests란 말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익을 위해서 언론이 존재해야한다고 했지만 아직도 공익이 무엇이나 라는 논쟁은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기

자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판단하고 어떤 사회적 가치, 지향하는 바를 모두 응축시켜서 소위 ‘야마’를 잡는다. 야마 없이 기사를 쓴다면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해서 기사를 쓰게 되는데 기사 한 건당 한 면을 다 써야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의견과 팩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경계 짓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저는 어렵다고 보고 다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분에서 이 정도는 의견이고 이것은 사실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어디까지 정해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겠지만 무조건 개인의 주장이라고 치부해서도 안 될 것이고 사실적인 어떤 팩트라고 그렇게 쓰는 기사가 좋은 것이고 바람직한 기사라고 보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논의 중에 기자들 개인의 역할론에 대해서 많은 기대와 비중을 두는 미시론적 접근 방식은 현실적이지 못하고, 기사는 이런 식으로 써야한다는 당위론 자체도 굉장히 해묵은 얘기 같다. 따라서 기자는 기사를 쓰고 판단은 독자가 하는 것이다. 50만부를 발행하는 신문사의 독자는 그것에 맞는 가치관에 따라가는 것이고 200만부는 또 다른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다. 50만부 독자나 200만부 독자는 나름대로 다른 판단을 하고 그 신문을 평가할 것이다. 그런데 소위 major 보수 언론 또는 진보 언론이 서로 상대방의 가치를 강요하지는 않아야한다. 또 다른 틀에 놓고 이것은 왜곡보다 이것은 잘못되고 편향된 보도라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잘못된 전제로 출발하지 않나 생각한다.

또 하나 이제는 온라인이 검증의 절차만 있다면 온라인이 앞으로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고 그만큼 맥락을 이해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이미 중앙일보도 이미 시작했다. 스토리텔링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그런 부분에서는 스트레이트와 박스를 구분하는, 의견과 팩트의 전달을 애써 구분하는 그런 흐름자체도 이제는 융합이 되어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의견과 팩트를 구분하는 시도자체가 어렵고 과거 아날로그 시대의 구분법이 아닌가 생각한다. 또 하나는 구조적인 부분이다. 기자가 설사 내가 이런 가치로 기사를 쓰고 싶어도 신문사 수습기자부터 보통 사장까지의 단계를 보면 15가지의 수직적 구조 안에서 경제적 압박의 생존의 목표가 있는 상황에서 얼마만큼 기자가 기사를 쓸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시장구조의 변화, 신문의 재정적 위기상황에 대한 타계, 그동안의 효율성과 야마 기사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있던 편집국 내부의 수직적 구조 자체를 이제는 수평적 구조로 바꾸는 구조적인 틀 자체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념적 편향성이나 정파성의 사실보도의 논란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생각된다.

사회자 = 지정 토론자의 토론이 끝났다. 발제자께서 코멘트를 해주시겠다.

발제자 = 김재옥 소시모 회장님 말씀 잘 들었다. 일반 독자들이 특별히 생각하는 사실과 의견 구분의 피해문제를 잘 지적해 주셨다. 저도 100%공감하고 그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언론인의 노력을 저도 함께 촉구하고 싶다.

김재옥 회장님께서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중요한 지적을 했다. 계속 의견과 사실의 구분을 문제 삼고 있는데도 똑같은 방식으로 위반된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 사실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진단으로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라고 하면서 김 회장은 언론이 강해서 그런 것 아니냐고 했지만 그런 점도 있을 거라고 본다.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사실 저는 언론이 최근에 와서 약해져서 문제라고 생각한다. 예컨대 제가 이해하는 한국의 좋은 언론이라는 것은 오히려 힘이 강하고 사회적 역할을 더 많이 하고 주창을 더 많이 하는 대신 그만큼 책임과 윤리도 더 많이 지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최근에 기자정신이 약해진다는 말도 있는데 윤리의식을 마치 기자들이 나는 회사의 사원처럼 일하면 되니까 저야 되는 윤리의 어떤 책임의 범주와 내용도 약해져도 된다고 행동하는 듯한 것은 반대라고 본다. 오히려 더 강해져야하고 주장을 더 해야 하고 대신 윤리 책임의식을 더 많이지는 쪽이 맞는 방향이다.

그리고 김 회장님의 방안으로 언론사내의 체크기능을 강화하자는 말씀에는 저도 동의한다. 예컨대 한국 언론의 관급보도에 대한 의존성은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데 이것 자체가 사실을 확보하는 좋은 방법이다. 정부 부처 등에서 나오는 보도자료에 의해서 기사를 쫓아 가면 틀릴 일이 없다. 그러나 사실 이리다보니까 언론으로서 오히려 더 중요한 일을 못하고 정부 부처나 이런데서 의도적으로 나오는 스피어를 먹이는 발표를 그대로 보도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정부 부처의 미스 리딩 인포메이션을 확인해주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이것도 언론사의 중요한 경향성이라고 본다.

최근 인터넷이 생기면서 주장을 검토하지 않고 보도하는 것이 우리 언론의 상식이 된 듯하다. 이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물론 모든 주장을 제3의 방법을 통해 재검증을 해서 언론이 일일이 다 보도하는 것은 과도한 일이지만 중요한 주장에 대해서는 언론이 별도의 verification을 해서, 말하자면 정부부처의 a국장은 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리가 확인해본 결과는 반만 진실이다 이렇게 보도하는 것이 진정한 보도이다, 그런 식의 체크를 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갖춰야한다는 것이다.

경제적 이해관계의 편향성에 대해서 언론이 무감각한데, 1997년 이후로 정치적 보도에 있어서 개선하려는 노력이 많이 있었다. 제가 97년 대선부터 선거보도는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해왔었다. 선거보도 같은 경우는 획기적으로 좋아졌다. 하지만 경제보도는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경향이 있다. 투자정보나 아파트 정보를 보면 속된 말로 속이 뻥 뚫리는데 그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이 필요하다.

김경호 교수님도 말씀 잘 들었다. 김교수님은 2.5점이라고 하시면서 불가능하지만 때로는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언론 법제와 관련된 중요한 논점들을 제시해 주셨다. 저도 동감한다.

그러나 제 입장은 2번 불가능하지만 해야 한다. 불가능하지만 타당성 요구에 응답할 윤리적 의무가 제시되는데 그 윤리적 의무는 아까 말한 진술적 엄용과 규범적 엄명이 구분되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 응답해야 될 의무도 내용적으로 다르므로 다르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의견과 사실의 불가능하지만 해야 한다는 입장에 가깝다고 말씀드렸다. 윤리적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교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의견보호에 대해 관련된 문제를 말씀하셨다.

언론인들은 사실의 확인문제만 집착하는 측면이 있는데 언론을 포함한 모든 컬럼 쓰시는 분들, 취재대상이 되는 일반인들의 의견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누가 보호해야 하나. 언론이 해야 된다. 언론은 사실보도를 해야 하는 중요한 의무도 있지만 시민사회에서 제기되는 모든 의견을 가진 개인과 집단의 진정한 의견을 정당히 보도함으로써 보호해야 될 의무도 있다고 생각한다. 언론 자신도 그 특권을 말하자면 도움 받아야 될 특권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점은 굉장히 중요한 지적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말씀을 사족처럼 꼭 붙이고 싶다. 의견보도도 만약 그 의견이 사실에 근거해있다면 그러나 흔히 대부분의 사실 등은 사실에 기초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에 관해서 검증적인 책임의 의무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그리고 기자협회 김경호 회장님께서 한국 언론의 정파적이고 편파적인 특징이 있고 이것이 구조적인 특징이 아니겠나라고 보시고 맨 마지막에는 이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집합적, 개인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저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고쳐보자고 해서 고쳐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별도의 인센티브 시스템이 있어야한다고 본다. 구조개혁에 관련된 문제는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는 고민하고 모색해야 할 단계 같다.

그리고 김회장께서 다원성과 다양성을 말씀했는데 이 주장은 중요한 지적이다. 언론은 다원성을 추구하는게 필연적인 의무인가. 다원성을 하는 것이 덕목인 것은 같은데 이것을 해야만 하는가. 여기서 저는 약간 망설여진다. 저는 공영방송은 그래야한다고 본다. 공영방송은 설립이념에 의해서 공공의 의무가 있고 사회적으로 대변 받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을 해야 하는 보편적인 대변의 의무가 있다. 그런데 다른 언론들도 예컨대 일반 신문들도 다양성을 추구해야할까. 하면 안하는 것보단 좋겠지만 해야 한다는 주장은 완전히 다른 주장이고 저는 그럴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언론이라는 것은 복잡한 현실을 이해하고 감당할 수 있게, 그리고 어떤 사실연관의 본질을 보일 수 있게끔 통합적 시각을 제시하는 담론기구이지 언론이 대의적 기구는 아니다. 다양성은 안하는 것보다는 하는게 좋지만 모두가 해야 할 필요는 없다.

사회자 =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자의 토론 과정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론적인 측면이 강조되다보니까 사실과 의견이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되어서 사실 신문윤리강령의 내용과는 상치되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이론적이니까 그렇다.

이론은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신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실과 의견을 너무 섞어서 이 기사는 사실에 기초한 것인지 의견을 기사로 쓴 것인지의 문제가 제기되어서 이 자리를 만들게 된 점을 볼 때 지금부터는 실질적인 문제로써 어느 정도 분리를 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사를 작성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다. 특히 참여하신 분들이 언론인들이시고 하니까 그쪽 측면에서 실제로 언론이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윤리강령 안에) 분리되어야 하는 명제가 그동안 확립되다시피 한 것은 뜻하는 바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나. 그런 측면에서 토론이 진행되었으면 한다.

이현락 경기일보 사장 = 심의에 매달 한번씩 참여하는 윤리위원으로 있다. 교수님 발제문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발제를 하시고 토론하는 논점이 사실과 오피니언 관계보다는 팩트와 벨류의 관계로 옮겨가는 것 같다.

저는 사실과 의견의 분리가 가능하나에서는 첫 번째 손을 든 사람이다. 말하자면 사실과 가치의 관계라고 논점을 좁히면 저는 첫 번째 손을 들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기사는 그 자체가 가치판단이 개입된 것이다. 이것을 기사로 다룰 것이냐 안 다룰 것이냐는 선택의 문제이고 선택은 가치판단이다. 이 사안을 다루는데 어떤 팩트를 동원할 것이냐 팩트 선택이 또 가치판단이다. 상하좌우로 살필 것이냐 전후만 살필 것이냐 등 또한 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 누구의 의견을 어떻게 듣고 그 사람의 의견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또 가치판단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궁극적으로 기사에서 가치를 배제하고 기사를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천적인 차원으로 낮춰서 기사를 다룸에 있어서 지나치게 의견을 넣고

한쪽방향으로 몰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 윤리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고 신문윤리 차원에서 기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고쳐가야 하는가에 논점이 몰아져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굉장히 세속적이지만 그 논점이 중요하다. 매일매일 부딪치는 문제이다.

지금 대표적으로 신문이 방송저널리즘을 닮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피디 저널리즘이라는 용어가 요즘 등장했지만 피디 돌이 나와서 이놈 죽일 놈 저놈 살릴 놈 이런 식으로 해 버린다. 방송 쪽 보도국 쪽에서는 저런 식의 보도는 옳지 않다고 얘기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유행이 되어 간다.

저희들 일선 기자 때 선배들에게 꾸중을 듣는 것과 다르게 요즘 젊은 기자들은 리드부터 의견을 넣는 것이다. 제가 얘기하는 오피니언은 그것을 말한다.

교수님께서도 이렇게 지적을 하셨다. 앞으로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TV 리포터들도 보도 후 앞으로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 됩니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일본, 미국 리포트들이나 유럽리포트들도 이렇게 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언제부터인지 이것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되어 있다. 그것을 닮아서인지 기사도 리드를 보면 그렇다.

저는 편집국장도 지냈지만 절대 용납 안했다. 리드에다 앞으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 된다 의혹을 받고 있다 그냥 써주면 되는데. 그리고 대학에서도 글쓰기를 가르쳤다. 그때 형용사 부사를 쓰지 말라고 가르쳤다. 왜냐하면 가치가 들어가니까 신문 문장 안에서 의견을 집어넣는 식의 어휘가 많고 팩트를 동원하는데 그런 측면의 팩트를 동원하는 것이 너무 많아 결국은 공정성을 해치는 측면에서 엄격히 규제가 되어야 한다. 또 표현은 그렇지만 팩트를 동원하고 어느 사안의 한 측면만 봐서 부각시키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고쳐야 하겠다.

다양성 문제는 신문 개별언론 자체가 우리는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각자 관점이 다르니까 회사, 기자, 데스크, 편집자의 관점이 다르니까 각자 다른 관점의 보도가 나오면 그것이 어우러져서 다양성이 나오는 것이다. 결국은 실천의 문제인데 언론재단에서 신입기자들 교육을 시킬 때 이점을 충분히 교육을 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물론 뉴 저널리즘이 미국에서 나오고 나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객관보도가 가능 하나 사실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애긴데 신문이 살기 위해서도 말하자면 인터넷 저널리즘이 나와서 검증 안된 얘기들이 얼마나 남발하는가. 이럴 때 일수록 신문은 공정성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기자들 훈련을 시켜야한다. 각사에서 물론 해야겠지만 언론재단에서 교육할 때 이점을 중점적으로 인지시켜줬으면 한다.

국민일보 성기철 부국장 = 저는 세 번째 손을 들었다. 저는 사실보도를 객관보도라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객관보도는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사실보도가 존재할 수 있다는 명제가 맞으려고 한다면 어떤 보도자료나 사회현상에 대해서 a, b, c 세 기자가 기사를 쓰면 똑같은 기사가 나와야 하는데 전혀 다른 기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사회 현실이고 보면 사실보도나 객관보도는 굉장히 힘든 것이라고 생각해왔다.

통상 과거에 제가 기자생활 할 때는 스트레이트 면에는 사실보도를 하고 오피니언 면에는 의견보도를 하는 것으로 했으나 최근에는 스트레이트 1면 보도에서부터 의견이 들어가는 보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주관이 들어가는 보도가 잘못된 것이나 위험성 있는 것

이냐고 물었을 때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권위주의 시대에 신문이 똑같다는 비판을 많이 들었었다. 이렇다면 전두환 박정희 시대 때 청와대 기사 같은 경우 보도자료를 가지고 기사를 쓰면 모든 신문의 기사가 다 똑같이 썼었다. 그렇다면 그런 보도가 과연 맞는 것인가 독자를 위해서 유익한 것인가라고 물었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지금처럼 청와대 기사 같은 경우도 1면부터 모든 신문의 기사가 다 다르게 기사가 나가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팩트, 사실보도에 너무 관심을 가지고 치중을 해서 신문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회자 = 그런데 사실보도, 객관보도라고 해서 기사가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 당시에는 아예 full 기사를 쓴 것이기 때문에 다르고 그 당시 청와대는 특수했다.

조선일보 김형기 부국장 = 가면 갈수록 신문은 좀더 분석적이고 의견이 많이 가미된 이런 쪽의 신문을 할 수 밖에 없고 전통적인 의미의 사실보도는 다른 매체에 양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왔고 따라서 신문에서 순수 사실보도의 영역은 자꾸 줄어드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런 전제에서 볼 때 어차피 그것이 트렌드적 수순이라면 의견이 가미되고 하는 그런 보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3가지 경고는 근거가 있어야하고 공정성이 있고 균형을 갖춰야한다고 말씀하셨다. 이 근거를 가져야한다는 것은 사실관계 팩트가 정확해야한다는 것인데 그것을 어기면 요즘 당연히 정정보도도 해야 하고 오보를 함으로써 생기게 되는 피의자에게는 민사, 형사적으로 책임도 져야 해서 근거가 있는 보도는 누구나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공정성의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김재옥 회장도 말씀하셨지만 언론들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왜곡해서 제대로 반영을 안 해주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부분은 과거와 달리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든가, 명예훼손을 비롯한 상업적인 이해당사자들의 의견표출의 기능이 많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역시 과거와 달리 순전히 언론종사자들의 도덕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상업적으로 공정성을 지키지 않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균형의 문제인데, 저는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왔었다. 앞전에 말씀하셨듯이 기계적인 균형이란 상업적 배경에서 신문이 생존하기 위한 한 방편일 뿐이지 언론이 추구해야 될 근본적인 가치는 아니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결국은 균형이란 것은 각 언론사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어떤 가치를 반영해서 신문을 만들 것이냐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는 A라는 논조를 지키기 위해서 신문을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은 각 언론사의 판단의 문제인 것이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시장이라고 생각한다.

시장에서 독자들은 각 신문의 이런 경향성, 이런 논조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것을 사고자하는 독자는 사볼 것이고 원치 않는 독자는 다른 논조를 찾아가고 하는 것이 우리 바뀐 언론 환경에서 자연적으로 가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한다.

제가 드린 말씀이 중복된 점도 있고 하지만 주체인 신문윤리위원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상황이 바뀐 만큼 현재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에 있는 사실보도와 의견보도의 구분 조항도 이제는 시대에 맞게 수정을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얼마 전에 정병진 위원과 함께 신문윤리강령과 실천요강 개정하는 작업을 했다. 거기서는 주로 출판물의 인용과 출처명시, 형사피의자들의 사진과 실명을 얼마나 공개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실천요강 개정 작업을 했다. 그것을 현실에 맞춰서 각 언론사 양식에 맡기는 쪽으로 개정을 했는데,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이 사실보도와 의견보도 관계이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고 그 조항을 지금 바꾸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신다면 심의를 할 때 지금보다는 좀더 유연하고 융통성을 뒀서 심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한다.

사회자 = 발제자께서 코멘트 하시죠.

발제자 = 이현락 사장님 말씀 잘 들었다. 특히 피디 저널리즘에 관련해서 말씀하신 우리 언론의 주창성이 너무 강하다.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말씀은 그것이 제가 문제 삼는 우리 언론의 심한 경향성인 것이다. 그것은 공정성 문제 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문제점들이 유발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회적인 비판과 감시가 필요하다고 믿는다.

그리고 맨 처음에 팩트 벨류가 아니라 팩트 오피니언 구분은 가능하다고 하신 점은 그런 점은 유념해서 제 원고를 고치도록 해보겠다.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다양성의 개별언론은 추구할 필요가 없다는 저의 주장에 동의해 주셨는데, 생각해 보면 당연히 개별 언론은 이것을 꼭 해야 한다는 덕목과 의무를 추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 사회의 전체 언론 시스템은 전체 의견을 다양하게 보장하는게 맞는 것 같다. 이 명제는 옳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한 여론 다양성 규제에 관련된 규제책 및 법을 만드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이다. 그래서 개별 언론의 진정성, 공정성, 독자에 대한 별도로 있어야 되는 전체 언론의 다양성은 필요한데 이것이 체계적으로 갖춰지기 위해서 어떤 규제적인 조치가 있어야 될지. 사실은 이거에 대해 논의가 잘 안 모아져서 김대중 정부 이후로 신문에 관련된 모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한 논란이 유발됐었는데 아직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본다.

그런 와중에 새로운 신문 규제에 관련된 신문사 활성화라는 것 등에 대한 논의가 그 외에도 전개되고 있는데 이런 아주 간단한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의견의 다양성 보장에 대한 언론인들 사이에서도 합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정부라든지 규제기구에 외부적인 어떤 간섭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를 더해본다.

성기철 부국장께서 현실적으로 객관보도가 불가능하다라는 점에서는 저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지만 심지어 1면부터 스트레이트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글썽요. 제 논문의 주장은 의견이 들어갈 수 있지만 들어간다면 거기에 대한 강력한 정당화 주장이 제기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언론인들은 응답의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1면 기사에 사실에 대한 정당화 주장에 대한 요구에 대한 응답의 의무와 더불어 같은 기사에 동시의 의견에 대한 규범적인 요구에 대한 응답도 담으려면 사실 언론인이 해야 될 일이 1면에 있는 스트레이트와 의견이 혼합되어 있는 그 기사를 쓰면서 너무나 많은 일을 해야 될 것이다. 모든 기사를 체크해야 할 것이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정당한지 공정성에 대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우리 언론인들이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는지. 매일 1면에 모든 정당화 요구에 대해서 답변할 정도로 충분히 팩트 체크를 하고 공정하고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언론이 잘 훈련되어있고 취재조직이 충분히 되어있고 윤리적인가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조선일보 김형기 부국장께서는 어차피 팩트에 관련된 것은 통신사나 인터넷이나 많이 나오니까 주요한 언론들은 이른바 해석보도, 분석 등을 강조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전적으로 동감한다. 그러나 해석보도와 분석보도의 경우는 훨씬 비용도 많이 들고 노력이 더 든다.

그런 보도를 하는 만큼 윤리적으로 저야 하는 책임의 범위와 내용의 깊이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 해석보도와 분석보도를 강화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신문윤리실천요강을 개정하자는 의견을 내셨는데요. 저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개선의 방향은 더 자율적이고 더 효과적인 방향이어야지 풀어주는 방향은 아닌 것 같다. 이것은 앞으로 논의를 해봐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김지영 심의위원 = 예전 기자 초년병 시절에 많이 하는 얘기가 춘추필법이란 얘기다. 춘추필법이 무엇이나면 역사를 기술하는 방법으로 사실을 중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 평가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것은 공자의 역사기술방법이고 한국 언론의 중요한 하나의 원칙인 것처럼 전해져왔다.

저는 매일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는 저널리즘의 현실을 어떻게 분석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얘기하고 싶다. 아까 김경호 회장께서 말씀하신 스토리텔링 방식의 문장 스타일 변화와 같이 이런 것도 충분히 변화 시킬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현재 스트레이트 기사의 전범으로 생각하는 문장 스타일이 마감시간 헤드라인에는 지면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것이고 지면의 제약과 마감시간의 제한이 아니면 충분히 문장 스타일 자체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형기 부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신문윤리강령에 사실보도와 의견보도에 관한 조항 역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현재 기존에 일해 왔던 사실보도와 의견보도의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 앞으로 나타날 부정적인 현상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그 부정적인 요소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안을 만들 것 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

저희는 매일 모든 신문을 심의하는데 예를 들어 정권 바뀌는 1년 전후로 스트레이트 기사에 사설제목을 다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것은 외국 저널리즘 원칙에 의한 것으로 이 부분은 어디까지 우리가 수용을 할 것인가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제목에 따옴표를 치던 안치던 간에 스트레이트 기사제목으로 사설제목을 다는 경우는 아무리 우리가 사실보도와 의견보도의 구분에서 재해석이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관리조항이 변할 수 있다고 해도 이 부분은 사실에 대한 개인의 의견의 지나친 개입이 아닌가 생각한다.

신수용 대전일보 사장 = 언론문화가 지방에는 너무 많이 변해 있다. 서울에서 보는 눈과 지방에서의 눈, 지역별로의 눈이 너무나 다르다. 87년도 오대양 사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기사를 다룬 때가 있었다. 국회와 청와대를 뛰면서 정말 서울과 지방. 사실보도가 가능한가. 1995년 지방자치 이후에 지방언론들이 사실보도를 하고 있는가라는 제도적인 얘기까지 하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와 충청남도, 충청남도와 전북. 이런 지역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때 정말 이슈가 되고 지역별 갈등을 초래하고 있을 때 정말 공정보도를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고 권익을 대변하는 지방지가 공정보도가 우선인지 권익이 우선인지 혼란스럽다. 또 하나는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전국 중등교장 공무원들을 상대로 ‘신문을 알자’라는 강의를 하는 도중에 어느 한 교장선생님이 “대전일보도 정부 돈 받는가”라고 물었을 때 안받는다고 했고 “왜 안 받냐”는 질문에 제도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지만 그것에 대해 우리 독자들에게 의견을 물었더니 안 받는 것이 오히려 신뢰도가 높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 받는 언론사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교장 선생님 말씀은 정말 정부 돈을 받고 제대로 보도하겠는가.

제도적인 문제는 없는가라고 질문을 했다.

언론 문화가 변했다는 사실은 서두에 말했지만 지역발전기금이나 신문발전기금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정부차원에서 언론이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하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언론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고 민주주의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준 만큼 정부에서 뭔가 정말 어렵게 도와준다면 정부가 직접지원이 아니라 어떤 언론사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금을 만들어서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 지금처럼 선별의 선별을 하고 그 선별의 공정성에 문제가 야기되고 형평성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또 다르게 신뢰의 신뢰감에 대해서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정말 이것은 단순하게 고급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권하겠는가. 설사 신문이 정부 돈을 받아서 공정하지 않게 보도하지는 않겠지만 국민들이 생각할 때 정부 돈을 받아서 신문이 운영되고 있다는 부분에는 답변을 못했다. 신문발전기금을 받는 다고 잘못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사실보도에 있어서 독자들의 생각은 다르다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문제도 제도적인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해서 정말 신문이 사실보도하고 공정보도와 균형적인 보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부분도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봐야한다고 생각한다. 지방언론이 얼마나 변했나를 보시면 놀라실 것이다. 이제는 선동적 충동적인 기사 수두룩하다. 나쁜 기사가 좋은 기사를 다 누르고 보도되는 것이 현실이다.

문명호 심의위원 = 제가 외신부에 있을 때 AFP 기사를 보면서 괜찮다 싶어서 죽 읽었다. 기사는 잘 썼다. 소위 말하는 야마도 잘 잡고 팩트도 객관적 사실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얘기도 쓰면서 결론 같지 않은 마지막까지도 자기주장을 노골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아닌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 하는 그런 기사였다.

어떻게 보면 스트레이트성 피쳐랄까 그런 성향의 기사인데, 통신 기사들은 스트레이트가 강점이기 때문에 스트레이트성 피쳐들을 쉽게 접하는데 그 기사를 보고 너무 마음에 들었다. 그런데 소비유발 기사였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기술적으로 볼 때 그 기사는 노골적으로 지지하거나 요구하거나 한 기사는 아니었다. 그 기사가 어떤 의견이나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기사로써 하자가 없구나라고 생각했다.

그 기사를 보면서 직업적인 관점에서 볼 때 기사는 잘 써야지만 이런 식으로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담아내는 방법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다. 이 말씀을 모두에게 하는 이유는 아까 이준웅 교수께서 지적을 하실 때. 저는 대학에서 사학을 전공했고 사학은 신문기사의 기술방식과 학문의 세계에서 기술하는 접근방식이 가장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대학을 졸업할 때는 사실과 의견은 엄격하게 분리될 수 없다고 이미 깨닫고 이해를 했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사에서 20년 넘게 근무하고 지금은 신문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그런 학문적인 접근방식과 관계없이 한국 신문에서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유용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가치라고 설명을 들었다.

저는 아까 이현락 사장께서 적절히 지적하셨지만 오늘 논의가 원래 위원회에서 맨 처음 구성했던 논의와 약간 판트가 빗나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저널리스트들이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볼 때와 크리에이션들이 우리가 안고 있는 논지를 한 걸음 옆에 서서 볼 때와는 과정의 차이가 다를 수 있고 그 문제를 논리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장치들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사실 오늘 주제와 관련 되서는 필요가 없지는 않지만 너무 우회한 길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제가 느끼는 요즘 기사들에 스트레이트와 오피니언 기사의 차이를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의 논란을 떠나서 이미 현실적으로 그런 기사들이 존재한다. 신문 1면에 스트레이트를 빙자한 오피니언 기사들이 많이 있다. 그것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이미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신문에서 그렇게 벌어지는 것과 제주대 김교수님이 지적하신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것은 상황이 다르다.

종이신문 매체는 공간적 한계가 있어서 신문을 만들어서 독자에게 제공하는 사람들과 수용자인 독자들 사이에 대등한 경계가 이뤄지기 힘들다. 그런 장치가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장치는 극히 제한적이고 경우에 따라 형식적인 것들이다.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다르다. 한 기사가 뜨면 예를 들어 오마이뉴스 같은 경우에 웬만한 기사는 3천자가 넘는다. 신문의 기획기사 말고는 그런 기사들을 보기 힘들다. 그런데 그 기사의 글들을 읽고 댓글들이 올라오는데 굉장히 다양한 글들이다. 따라서 거기에서 얻은 장치들이 부족하다하더라도 이미 독자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장치의 부족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검증하거나 교정하는 방법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신문이 제한적인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취재하고 보도해서 전달을 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독자들의 판단의 문제, 선택의 문제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 독자가 그런 기사에 대한 신문사의 판단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장치의 불충분함을 인정하고 스스로 가능한 한 독자들이 선택을 함에 있어서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가, 그런 숙고나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기사와 노력의지와 비교를 해보면 사실 우리 관점에서는 매크한 관점에서 논의를 하는 자체가 사치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가 이런 논지를 놓고 하나하나씩의 철학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단계, 우리 사회에 아까 말했듯이 세속적인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있다고 한다면 전 아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굉장히 세속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제가 신문윤리위원회 심의위원으로서 신문을 봤던 사람으로서 볼 때 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문제인 것이다. 외국 신문들 워싱턴포스트나 뉴욕타임즈를 볼 때마다 놀라는 것 중 하나가 의도와 관계없이 그 사람들은 어느 시각에서든 문제를 긍정적이나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그 장치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단어선정, 쿼트 방법, 쿼트할 대상 선정방법 등의 것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독자와 생산자 사이의 암묵적이고 경험적으로 이루어진 게임의 룰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장치가 있지만 신문윤리위에서 오랜 선배들의 여러 가지 사례, 검토 등 노력으로 만든 그런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치들이 공공연하게 그리고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시당하고 있다. 그것조차도 불편하다고 생각한다면 사실 신문윤리위원회가 존속할 필요가 없다. 어떤 분이 논의 한 것처럼 시장에 내놓으면 된다. 어떤 신문을 만들든 독자가 몰리면 그만큼 신문사는 성공한 것 아니냐는 식의 논리면 필요 없다. 사회적 장치가 전혀 필요 없고 그것은 오히려 경제학자가 논의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 얘기가 오고가고 가장 기본적인 게임의 룰들이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공공연하게 무시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냉정하게 보고 깨달아야하는 것은 신문이 추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앞으로 신문에 종사하실 분들은 지금보다 더 비관적인 상황을 맞을지도 모르겠다. 지금이 자리는 그런 사실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우리가 그런 장치를 어떻게 만들고 지키느냐에 포인트를 맞춰야한다고 생각한다.

발제자 = 윤리위원회 심의실의 김지영 위원님께서 기사에도 의견이 결합되는 추세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논의가 추상적이었다고 하였고 한 가지 예컨대 사실기사인데 제목을 사설제목처럼 붙이는 것은 문제 아니냐고 하셨는데 100% 동감한다. 그런 것들이 제가 문제 삼는 한국 언론의 경향 속성이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자율적으로 내부적인 비판을 통해서 극복을 하느냐가 한국 언론의 큰 문제인데, 이것을 규제하려는 소위 마지막에 문명호 심의위원이 말씀하신 게임의 룰처럼 이것을 우리가 정당하다고 인식하고 있는지, 이것을 진짜 추구해야 될 가치라고 믿고 있는지, 이런 긴가민가하고 게다가 문제가 되는 것은 합의가 없고 거기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지금까지는 없었다. 그래서 이런 발제를 했다고 생각한다.

작년에도 쓴 논문이 이런 기사제목에 따옴표를 쓰면서 제목을 만들어내는 표제의 경향에 대한 논문을 썼었다. 기사 제목만 제대로 심의를 해도 상당히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신수용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의 언론문화는 이미 매우 다르다. 폭로주의나 선정주의 심지어 범죄 기사를 소위 말하는 모방 가능한 그런 것들도 거침없이 내는데 아마도 인터넷 언론의 영향력일수도 있겠고 또는 우리 언론의 전반적인 질적 저하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실에 대해 모두가 고민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이다. 저도 요즘 학생들에게 요즘 신문 엉망이라고 하면서도 제가 자괴적이다.

제가 전공이 언론학인데 자기 필드에 대해서 욕하는 것이 아무리 정당한 비판이라고 하더라도 말하는 사람의 마음은 편하지 않는 것이다. 저도 우리 필드가 발전하고 언론인이 되고 싶어 하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꿈을 주고 훌륭한 언론인으로써 기여하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현실에 대해 괴롭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다. 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실에 대한 교정 전략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모여 앉아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는 수 이외에 또한 무엇이 있겠나 싶다. 저도 더 많이 동참하고 싶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다.

신문발전기금, 소위 말하면 정부의 돈을 받으면서 어떻게 객관적일 수 있나. 이 논쟁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점이다. 즉 개별언론은 다양성을 추구할 필요가 없지만 전체 언론 시스템은 다양성을 유지할 해야 되는데 특별히 지방 언론에서는 더욱 더 그러하고 즉 서울과 지방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규제할 것인가는 어려운 문제이고 사실 이 문제를 정부나 다른 어떤 규제기관이 결정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게 언론인들의 책임방기인 것 같다. 언론인들이 자기 출신 언론사가 어디건 간에 이 문제는 모여앉아 논의를 해야 한다. 이런 논의사례는 찾아보면 많이 있다.

독일이나 네덜란드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한 심각한 고민들이 있었고 거기에 관련된 해법들도 있고 사회적인 합의도 만들어낸 사례들이 있다. 지방자치제 이후로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언론인들이 엄청나게 공정성을 무시하면서 말하자면 지역사회에 복무하려고 한다면 공정성의 의무를 충분하게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말하자면 주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지방 언론의 고유한 의무와 공정성을 수호해야 된다는 언론의 일반적인 원칙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물으셨는데 그것은 사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이다.

언론에는 책임의 범위가 있는 것 같다. 우리가 공정해야 된다는 범위는 굉장히 일반적인 것이지만 예컨대 우리가 소련에 있는 소수민족에 대해서까지 일일이 공정해야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책임의 범위는 흔히 우리 민족, 우리 독자, 우리 정부 등 이런 식이지 너무나 많이 퍼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김연아나 한국야구에 대해서 보도를 할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애국주의적이지만 누가 보면 명백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 보도를 태연스럽게 해도 언론이 그것을 별로 문제로 삼지 않고 사실상 국민들도 같이 좋아하면서 이런 부

분이 있는지 모른다.

하지만 책임의 범위는 현재사회에 와서 점점 커지고 있다. 국제적 오디언스가 만들어지고 있고 시리즌십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 예컨대 김연아 보도에 대한 중앙일보 보도를 일본인들이 보고 그 내용을 비판하는 기사를 일본 e채널이라고 하는 게시판에 올려서 일본 사람들이 중앙일보 보도에 대해서 엄청나게 얘기를 한다. 그 내용은 아실만큼 상상이 갈 것이다.

우리는 우리 독자만 생각해서 보도하지만 이미 보도의 영역은 동아시아로 퍼져가고 있다. 그럴 때 언론은 책임의 범위가 이미 생각하는 것보다 넓어지고 있다고 하는 현재사회의 이런 문제를 직면하는 것이다. 지방언론도 만약 지방 언론으로만 머문다고 한다면 협소한 관점에 주민들의 권익만을 보호하는 것이 옳을 것이지만 대전일보가 대전 사람만 보는 그런 신문이 아니고 범위가 넓어진다고 본다면 공정성 규범을 위반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문명호 심의위원께서는 AFP통신기사 말씀하면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런 민감한 내용들은 언론인이 아니면 감조차 잡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과 의견의 구분문제에 대해서 토론한 것이 너무 추상적인 것 아니냐, 현실적인 게임의 룰을 확정하고 그것을 따르느냐 마느냐는 식의 아주 구체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오늘의 논의는 사치다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의 지금까지 현상적인 논의수준을 봤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점을 고민하시는 것 같다.

제가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언론학계 보고서를 쓴 5인중의 교수 중 한명이다. 그때 당시에 보도국장을 쓰기 직전이었는데 당시 KBS 보도국장과 논의를 한 적이 있다. 보도국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느냐고 물으신 적이 있었는데 답변은 물론 제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 대답은 했지만 마음속 깊이 드는 의구심 중 하나는 어쩌면 이 보도국장과 서울대 교수라는 내가 이런 문제조차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논의의 출발점조차 찾아내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었다. 그때는 총선보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과정이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후 1년이 지나고 다시 토론을 또 했다. 그 자리에서 KBS, MBC 기자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지금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다시 어떻게 보도하는 것이 공정한 보도인지 모르겠다고 하더라. 우리 사회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1년 동안 했는데도 다시 논의를 통해서 배운 것이 없다고 고백하면 이건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었었다. 따라서 오늘 이 토론이 정말 사치스러운 논의 같지만 이런 토론을 자주 접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권순택 동아일보 논설위원 = 사실보도와 의견보도가 왜 구분 되어야 하는가라는 기본전제에 대한 논의 없이 사실보도와 의견보도는 분리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현실에서 이것이 가능하나 안하냐에서부터 논의를 출발했기 때문에 복잡해진 것 같다.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사실보도와 의견보도를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나 안하냐의 이런 논리로 시작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한다.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역할이 무엇이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공론장에서의 자유로운 의견 경쟁이 이뤄져야한다는 기본전제하에서 주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대전제를 우리가 무시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다. 그 전제에 동의한다면 이 원칙도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전공, 신문사에서 어떤 부서에서 어떤 기사를 주로 다루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생각의 차이가 다

를 수 있다고 본다.

저는 개인적으로 27년 신문사에서 일했지만 사회부만 15년 동안 사건을 많이 다뤘었다. 그때 당시 기사를 쓸 때는 형용사를 자제토록 했었다. 그래서 제가 기사에 쓰는 형용사 부사는 10개 정도 있고 그 외에는 쓰지 않았다. 그리고 3년 정도 논설위원이 되어서 글을 쓰는데 굉장히 쓰기 힘들다. 팩트위주로 글을 쓰도록 교육을 받아온터라 논리적으로 글쓰는 것이 굉장히 서툴다. 신문의 다양한 기사들 중 예로 어제 어디서 누가 죽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똑같이 쓸 수 있을 것인데 정치해설 기사라든가 정치에 관한 것들 등은 사실과 의견을 구분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다.

아까처럼 언론의 역할이 어떻게 되어야하는가라는 당위성을 전제로 한다면 언론이 사실과 의견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분리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대한민국에서 신문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만들면 신문이 잘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만약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신문이 잘 될 것 같으면 모든 신문이 그렇게 만들 것이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니냐. 시장과 독자의 요구대로 따라가면 되는가. 그것은 아까 말했던 민주주의에서 언론이 해야 될 당위와 상충되는 애기다.

미국신문은 공정하고 객관적이란 말은 동의하지 않는다. 미국신문은 단일기사는 공정하나 전체적으로는 공정하지 않다. 기사 하나하나에는 굉장히 객관적이지만 신문전체를 놓고 볼 때 공정한 보도가 아니다. 우리나라도 어떤 기사를 일면 톱으로 올릴 것이고 말 것인가는 신문사마다 가치관이 다르겠지만 기사 하나의 내부에서는 나름대로 공정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협의 기구가 있다고 보고 그것을 찾아간다면 저는 사실보도와 의견보도의 구분이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 본다.

문헌숙 한겨레 편집부국장 = 제목을 보면서 윤리위가 굉장히 절망감과 위기의식에서 이 자리를 마련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동의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신문사에서 한 때 통합 기사를 쓴 적이 있다. 최근에 까지도 유효한 일톱삼박이라고 1면 톱을 쓰면 그날 3면에 박스를 쓰는 것이 아직도 여러 신문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방식이다.

저희가 통합 기사를 쓰면서 독자서비스 측면에서 볼 때 어떤 것이 더 좋을까. 그리고 신문의 질적 제고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는가에 대해 고민하면서 통합 기사를 했었다.

통합 기사라는 것은 스트레이트 기사와 해설 기사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기사를 해서 일면에 다뤄보자는 것이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사실보도와 의견보도의 혼재다라고 해서 지금 여기서 굉장히 많은 윤리위반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당시 그런 기사를 다뤄서 윤리강령 위반이라는 부분의 지적을 받지는 않았다.

어떤 기사에 있어서 독자가 봤을 때 군더더기 없는 스트레이트 기사가 있기는 하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배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꼭 지면을 넘어가서 봤다. 3면이나 5면 이런 식으로. 그러나 그것이 결국 기자들이 쓸 때는 스트레이트 기사를 쓰면서 해설기사나 의견 기사를 다룰 때 여러 가지 혼재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섞여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독자들이 봤을 때 의미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기사가 막 섞여서 이것을 독자서비스 차원에서 한번 모아보자고 해서 통합 기사를 썼었다. 이런 것이 외신에서도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 기사를 운영했고, 내부에서는 논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것이 신문의 변화라고 생각을 했다.

그럼에도 여기서는 근거 있는 의견들, 이해다툼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이해를 반영하거나 이런 부분을 갖고 있지 않는 의견기사라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

부에서는 그것에 대한 가이드라인. 경제 부동산 기사나 외교안보 기사나 그런 것들에 있어서 규범과 모범이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출발했지만 통합기사라는게 완전 통합 기사를 갖추려면 어떻게 갖춰야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다. 그것의 완성도가 높아야 사실과 의견보도를 섞어서 해도 통합기사로써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어려웠다.

그리고 과정에 있어서 제작을 하는데 어려움이다. 지면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 제작상의 어려움 때문에 결국 지금처럼 일툭삼박으로 가고 있지만 저는 사실보도와 의견보도라는 것이 꼭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통합 기사를 조금 더 잘했다면 많은 외신에 있어서도 아까 문 위원 말씀 중에 그 기사에 들어갈 부분에 있어서 여러 조건들을 충분히 갖추어 놓으면 기사로서의 완성도는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결국은 그 부분에 있어서 굴절된 시각이 아니고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에서 자기 자사주의에 빠진다고나 그렇지 않는다면 공정성을 갖고 있다면 충분히 사실보도와 섞어서 써나갈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그 부분을 어떻게 지켜 나갈 것인가. 그리고 윤리위원회에서는 그 수준이 아니라 기사에 있어서 굉장히 어긋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언론의 역할에 있어서 결국은 사실보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권력을 감시한다고 했을 경우 의제 설정하는 부분이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큰 부분이 있다. 의제 설정을 하다보면 사실보도를 하면서도 거기에 의견과 주장이 담겨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도를 잘 지켜나가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의제 설정을 해나가야 하는 몫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안찬수 편집위원 = 신문윤리위원회는 학교 문법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하지 않냐하는 관점이다. 이미 언어생활이 보면 자유롭게 개별적 창의적으로 여러 가지 섞여 있어 많이 무너져 있는데 이미 그렇게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개별 사안사안에 대해서 잡으려고 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고 잘못갔을 경우 또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관계에 있다고 본다. 저희 언론 환경도 그런 관계를 통과하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하나의 룰(규범성)을 내세워서 규제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식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규범의 문법은 역할이나 위상은 많이 위축됐지만 어느 시점에 가서 무너져서는 안 될 몇 가지 원칙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다시 모여서 우리가 국어의 이런 규칙까지 파괴했을 때 이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인터넷의 발달, 글로벌화 등 여러 가지에 의해서 새로운 것은 받아들이고 창의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어나 문법책에 받아들이듯이 문법에 있어서 예를 들어 죄송하긴 하지만 우리의 언론과 신문도 그러한 관계에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 그리고 신문윤리위원회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규범성을 어느 정도 시점이 경과가 되었을 때 적어도 무너지지 않아야 될 것. 또는 이 정도는 모두가 공공으로 하나의 공배수로 또는 공대수로 함께 취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을 강화시키고 그 것을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규칙으로써 인정되도록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싶다.

가령 최근의 문제들로 돼지플루라는 단어를 보수건 진보건 좌나 우나 방송이나 신문이나 인터넷이나 누구나 다 이 용어를 썼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은 아니었다. 그 앞에 돼지라고 붙이면 돼지업자에게는 막대한 피해가 가는 것이고 발생하는 지역의 멕시코를 붙이면 국가간의 문제가 된다. 그래서 수학 기호 같은 것으로 붙였던 것 같은데 우리 언론은 이와 같은

것을 많이 해온다. 가령 예전으로 되돌아보면 쓰레기 무만두 이런 용어의 규정자체는 사실 이고 아니고 떠나서 이미 쓰레기고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한 것 아닌가. 이번에 돼지플루 같은 경우는 윤리위원회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용어를 씬으로 인해 어느 한 분야, 어느 한 소수자 등 우리 사회에 한 부분의 이익을 침해하고 무차별하게 쓴 것에 대해서 무너질 수 있는 사태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윤리위원회에서 시정하라는 결정통보를 보내오는데 제가 담당이어서 많이 접한다. 사후적 기술로 그치지 않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런 용어들을 쓰게 되면 한쪽의 이익을 침해 하는 게 아닌가 자제 하는게 좋지 않을까 또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위험요소가 있으니 미리 모여서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하자는 방향을 준다든가. 죄송하지만 지금 신문윤리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변화해 가는 상황에서 너무 세세하게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 어긋나고 잘못되었으니 고치라고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지금 현재 많은 언론사에서 크게 신경 쓰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전체가 동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잡아서 문제제기든 사후적으로든 거기에 공통된 요소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아무리 언어가 많이 변하지만 기본문법이 바뀐 문법의 역할을 하면서 일정정도 한 시기 시기마다 자리 매김을 하듯이 신문윤리위원회도 그런 식으로 바꿔보는 것은 어떨지 생각해본다.

사회자 = 토론은 여기서 마치고 세분에 대해서 발제자께서 코멘트를 하시고 심의기구로써 윤리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과 사단법인으로써 윤리위원회를 대표하는 김대성 이사장께서 말씀하시고 마치는 것으로 하자.

발제자 = 권순택 논설위원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다. 사실과 의견의 분리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에 전제가 되는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의 언론의 역할을 논의를 먼저 하면 어떤 사실, 어떤 의견, 어떤 분석이 어떤 사실이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역할을 할 것인가. 그런 식으로 논의가 변하니깐 훨씬 더 생산적이지 않겠는가 말씀하셨는데 좋은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제 논문 전체를 그런 식으로 재구성할 수도 있겠다 싶다.

그러나 권 위원께서는 결국에는 공정해봤자 점잖을 떨어봤자 민주주의를 해봤자 팔리지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에 대한 함축은 공정하지 않고 경향적이고 센세이셔널하고 시장에 따를 때 더 잘 팔릴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검증이 되었으면 좋겠다. 혹시 언론은 경향성을 드러냄으로써 더 안정적으로 독자를 확보하고 그럼으로써 시장에서 더 잘 건딜 수 있다라고 진심으로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확인된 바 없다. 예컨대 필립마이어나는 훌륭한 학자가 바로 이 문제로 실증적인 결과를 냈다. 미국에서도 독자가 없어지는 과정을 검토하기 위해서 선정적인 부분과 시장과의 관계에 대한 조사를 했었는데 미국에서는 선정적일수록 오히려 독자가 점점 더 나가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했고 그 책은 굉장히 많이 인용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그런 연구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없다. 예컨대 제가 2005년도에 쓴 글에 보면 정파적이면 신문독자가 떨어지나간다는 것은 검증했지만 선정적이고 시장에 따르는 이 문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리고 미국신문 말하면서 개별신문은 긍정적이지만 전체신문은 그렇지 않다는 부분도 백번 동감한다.

문현숙 부국장님의 일토크삼박에서 말하자면 통합기사를 시도한 과정 말씀도 흥미롭게 잘 들었다. 통합기사를 썼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의견기사와 분석 기사를 통합했

다고 해서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게 통합했는데 불공정하거나 문제가 될 때 문제가 되는 것이다. 정확히 지적하셨듯이 의견과 사실이 통합해서 쓸 경우에 어떻게 쓰는 것이 퀄리티리포팅인가.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구성요소를 가져야 좋은 기사인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저도 동감한다. 개별 사태에 대한 논의를 못하는 이유가 규칙이 없어서인지, 규칙이 있어도 개별 사태에서 적용과정에 수많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역시 이런 문제는 좋은 code of ethics를 만들고 거기에 좋은 심의위원들, 거기에 정당한 언론인들이 있어 활발하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다.

위원장 = 자연과학은 절대적 진리지만 사회과학은 절대적 진리일 수 없다. 결국은 상대적 진리인데, 우리가 상대적 진리에 대해 토론한 것 같다. 무슨 원칙이든지 사회현상이라는 것이 천태만상이라 적용될 수 없다. 원칙을 정해놓고 구체적 사실에 대해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원칙을 지켜나가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좋은 법률을 만들어놔도 실제 사회현상의 구체적 사건에 들어서 지금의 언론을 파괴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법칙의 가치, 사회윤리적인 규범가치 등의 해석을 통해서 적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사실보도와 의견구분이라고 되어있는데, 사실과 의견이 어떤 경우에는 구분이 되고 안 되는 흔재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경우가 분명히 일어나는데 그렇더라도 과연 공정했느냐 균형형을 맞추었느냐 가장 책임 있고 성의 있게 했느냐 등의 요소들이 나중에 구체적인 분쟁이나 심의에서 도움이 된다. 마찬가지로 윤리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과정에서 이해는 했지만 저는 중용을 좋아하지만 지나치면 관섭을 안 할 수 없다. 보도준칙의 이 부분을 수정하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조문을 보긴 했지만 어떻게 수정할 것 인가 생각이 안 난다. 저도 사실 40년 넘게 법률을 접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 조문에는 배경의 가치가 있고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이 여러 번 개정된 것으로 나와 있다. 가장 합리적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사회현상이 달라졌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다. 다만 해석을 통해서 과연 이 조문을 엄격하게 다룰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이지 이 조문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의 해답은 어렵다. 객관성, 공정성, 인권문제도 전부 다 합쳐져 있고 우리 스스로 언론의 자유를 하기 위해서 이 규정은 고쳐져야 하고 결국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사장 = 지금의 신문윤리강령은 1957년도에 편집인협회에서 만든 신문윤리강령을 놓고 신문협회, 신문방송편집인협회, 기자협회 3단체가 모여서 새 윤리조항 형식으로 개정해서 우리가 그 룰 안에서 심의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당시 변용식 편협회장에게 개정의견을 보내고 편집인협회에서 주도하여 여기에 참석하신 조선일보 김형기 부국장등이 모여 표절관련 부분 개정작업을 하고 3단체 승인으로 부분개정을 했었다.

우리가 한달에 한번씩 윤리위원회를 열어 윤리위원들이 모여 심의상정안을 결정하면 각 사에 결정통보를 하게 되어 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제재조항이 여러 가지 있지만 신문협회 회원사가 약 47개사 되는데 각 사에 통보를 하면 지적된 신문사가 local 신문사보다 major 신문사가 더 많고 그것을 통보하면 local보다 major 신문이 더 보도를 안 한다. 이런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한다.

방송위원회도 TV를 보면 시작하기 전에 본 방송은 방송심의규정을 준수한다고 나오고, 신문도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는 서약문이 써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든 강령에 의해서 각 신문사에 통보를 하면 잘 이행을 안 한다는 것이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자율기구로써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하는 신문을 만들어 줘야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신문윤리위원회에서 권하고 요청하는 사항이다. 그것이 잘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것이 마치 신문윤리위원회가 잘못 운영하는 것처럼 인식되어 지는 것 같다.

제가 발행인들 모임자리에서 항상 얘기하는 것이 신문윤리위에서 각 사로 보내는 결정통보를 회람을 시켜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했었다. 그러면 사례가 되기도 하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었다. 그래서 저희 신문윤리위원회는 일선에서 신문을 만드는 일선 종사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지 절대 해가 되지 않는다. 일선에서 계신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만든 법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셔야 좋은 신문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잘 준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